‘호남 물갈이’ 기대 걸고 총선 출마 러시

고위 공무원들 사퇴 지역 공들이기
현역 단체장들도 여론보며 ‘靜中動’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관료 출신들의 출마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을 8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최근 공무원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출마를 염두에 둔 고위공무원들도 조만간 공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일부는 단체장을 그만둔 뒤 현역 의원들과 맞붙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역 자치단체장들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관료 출신 출마 줄이어=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찌감치 선거판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광주의 경우 행정고시 출신으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이 서구 을 출마를 위해 지역민과 접촉을 늘리고 있고,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도 서구 을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탈락한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서구 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관선 담양군수와 고건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지낸 노병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초 공직을 그만두고 담양·곡성·구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오랫동안 지역 공직생활로 잔뼈가 굵은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조만간 공직을 사퇴하고 담양·곡성·구례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해남·완도·진도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승재 전 해양경찰서장의 경우 주변에서 고향인 광양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지만, 당사자인 이전 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역 단체장도 총선에 도전=현역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단체장 관할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거나 겹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12월13일) 사퇴해야 하며, 선거구가 다를 경우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광주·전남 3선 단체장은 유태명 동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다.

이 가운데 서삼석 무안군수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황주홍 군수 본인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유태명 동구청장도 본인 총선 출마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이긴 재선인 노관규 순천시장도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직 단체장들도 ‘와신상담’하며 내년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산구청장을 역임한 전갑길 전 국회의원은 광산 갑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현석 전 곡성군수도 담양·곡성·구례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오래전부터 영광·함평 출마를 위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U대회 수영장 불신 행정 질타

광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자치구간 통합 조정 부족과 광주시 교육청의 불합리한 임금체계 현실화를 지적하고, 광주 송암학원 조기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또 광주지역 각 도서관과 학교 대다수가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이날 개회를 통해 “U대회 수영장 건립과 관련, 남구와 광산구민의 지역갈등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광주시의 오락가락 시책과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불안한 신분에 놓여 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와 구청, 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각급 학교 도서실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15곳 중 54곳만 비치해 친일인명사전 보유율이 17.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손재홍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송암학원(진흥중·고)의 임시 이사를 선임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학교정상화가 요원해지고 있다”며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눈 감고 귀 닫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당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사퇴 압박 … 보선이냐 재선이냐

9월 내 사퇴땐 10월 보선 … 10월 넘기면 내년 4월에
재판시 유죄 확정땐 재선, 확정판결 시기 따라 결정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2억원 지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와 시기,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교육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핵심 측근의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이날 정상 출근했지만 그가 검찰 소환을 전후해 즉각 사퇴할지 아니면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재판을 받을지부터 관심이다. 언제 사퇴할지가 변수다. 사퇴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시기가 10월 말이 될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가 될지 결정된다.

자진 사퇴할 경우 사퇴 시기가 9월 말까지이면 10월말에, 10월 이후이면 내년 4월에 각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근거하면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시기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면 선거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라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한다.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재판까지 받는다면 최종 판결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선거 시기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 유죄가 나올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이같은 유죄 판결이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되면 4월 총선 때 재선거를 하며 그 이후에 확정되면 선거 시점도 늦춰진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점, ‘선의’로 박 교수에게 돈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곽 교육감이 돈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에서 곧바로 전환, 2억원 지원 사실을 밝히면서 적극적 입장을 취한 데다 통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돈 거래의 핵심인 ‘대가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가성이 없는 ‘선의(善意)’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비스트 박태규 귀국
저축銀 ‘로비 몸통’ 밝혀질까

정치권·재계·금융권에 메가톤급 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4개월여 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28일 귀국해 검찰수사에 응함에 따라 그동안 온갖 의혹만 무성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씨는 이전 정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쌓아온 인맥 등에 비춰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판 구명 로비를 벌이면서 기용한 로비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엄청난 파장 예고 = 박씨는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금융권, 언론계까지 고위층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과시해 온 탓에, 검찰 주변에서는 어렵게 돌아온 박씨가 입을 열 경우 충격파가 엄청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도피하면서 “은행이 재기하려면 (검찰에서) 내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남겼다는 전언도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박씨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뒤를 봐준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한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박씨가 고심 끝에 자진귀국을 택한 만큼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 역할에 대해 최소한 ‘모르쇠’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비 몸통’ 찾아낼까 = 검찰은 근 반년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파헤친 결과 현재까지 60여명의 피의자를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등 비중 있는 정관계 인사를 기소하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기에는 십수년간 불법대출을 비롯해 7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배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몸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씨는 ‘꼬리 잘린’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의 실체를 규명할 마지막 남은 핵심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뉴스